

다산포럼

차미례



30여 년 전 기자 초년병 시절에 박정희 정부의 경제기획원 물가통제관인 여성공무원을 인턴부한 적이 있었다. 별다른 업적보다는, 특수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데스크의 취재 지시를 받았던 것 같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홍일점'이라는 말이 살아있던 시절이었으니까.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날이면 날마다 물가가 뛰는 인플레이션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건국 이래 전통(?)과 같았다.

물가는 내린 적이 없고 "쌀값, 물값, 연탄값, 줄레 줄레 줄레..." 빛을 지고 사는 김치하 담시 '비어(蜚語)'의 주인공처럼 서민들은 언제나 먹고 살기에 허덕였다. 짜장면이나 쌀값이 건국 이래 60여 년 간 몇백배가 올랐는지 모른다.

그때 나는 물가통제 품목에 관유리, 핫코일처럼 일반 국민의 생활필요품이 아닌 생소한 공산품이 포함되고,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물건은 최신 제품이 아닌 전년도 모델이 통계에 잡힌다는 신기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렇지만 신뢰감 대신 믿기 불편한 느

낌이었다. 과학적인 통계방법이라기 보다는 항목 구성이 억지스럽게 느껴졌고, "일반 국민들이 이런걸 자세히 알까?"하는 답답한 마음이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소비자상품

과 서비스의 가격을 매월 조사하며 구입빈도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에는 가중치를 주어 물가지수에 더 많은 비중을 갖게 한다. 식료품, 의복 등 12가지 분야 500여 품목의 물가를 기준으로 5년만에 한번씩 이를 조정한다.

올들어 물가가 폭등을 멈추지 않고 드디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 4%를 훌쩍 뛰어 넘었다. 그런데 10월까지 평균 4.4%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하던 물가가 갑자기 '뚝'하며 떨어졌다. 11월엔 4.0% 상승인데 그것도 4.0%이하가 아니고 미만이거나 목표치 아래로 물가를 잡은

위업을 정부가 달성했다는 얘기가. 이게 웬일인가. 내가 30년째 다니는 재래시장 상인들도 물가 때문에 죽었다고 하고 명예퇴직, 정년퇴직자들은 비장하게 '안락고 안쓰고 버티기'로 일관해도 무서운 물가 탓에 다달이 빚만 늘고다! 아우성인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진상은 금세 드러났다. 지난달 구직 포기자를 빼고 실업률을 3%라고 발표한 '고용대박' 통계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물가를 '수확적으로' 안정시킨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적용하던 조사품목과 가중치를 이번에 바꾸면서 12월1일로 예정

금반지의 위력

됐던 물가지수개편을 한달 앞당기고 489개 품목에서 481개로 줄인 새 기준을 작년 1월부터 소급 적용했다.

특히 몇 년 새 국제 금시세 폭등으로 가격이 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치솟은 금반지가 물가상승 주범으로 제거대상이 되었고, 많이 오른 쌀과 전월세 등은 가중치를 낮췄다. 금반지는 93년도에 유엔이 자선으로 분류했다는 이유로 이제와서 소비품에서 제외되어 물가를 0.25%나 낮추는 효과를 발휘했다.

구체금융의 위기 시에는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헌납했던 금반지가 이제는 목록

에서 빠지는 '재외 효과'만으로 물가를 잡아주다니, 물건에다 애국헌장을 주는 서훈제도가 있다면 금반지가 받아야 한다.

나라의 물가지수 발표가 국민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와 괴리가 있었던 건 어제 오날일이 아니다. '통계의 마술'의 저자인 대릴 허프드 통계숫자는 조사자의 자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통계조작의 유혹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나 권력자의 의도적 통계조작에 속지 않으려면 믿기 이상한 '값(깎세)'으로 그 허위를 간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을 반영 못하고 체감물가와도 동떨어진 새 물가지수를 보면서 정권의 질박함과 다급함을 읽게 된다.

원자력발전을 녹색성장이라 강변하고, 인위적 하천개발을 친환경사업이라 부르며, 나무 몇그루 심은 개발지를 생태아파트라 명명하는 언어의 착란을 넘어, 이제는 정부 발표의 언더리 통계까지 가로, 세로로 스캔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딱하다.

더 나은 삶이 보이지도 않는데 말년에 국어와 산수까지 새삼 복습해야 하는 우리 중·노년층, 등록금 마련에 허덕이다간 신학 대학 졸업을 해도 구직 포기자가 된 채 대대적인 고졸자 지원책이나 어이없이 바라보는 청년들... 그래서 사람들은 촛불을 든다. <인문인·번역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광주흥사단, 그리고 광주 시민운동의 미래



문병훈

광주 시민운동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핵심은 오늘날 한국사회와 맞물려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급감하고 있다. 원인은 중산층의 몰락과 지식계층의 보수화로 집약된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저임금의 고착화, 비정규직의 양산이 이어지고 있고, 겨우 중산층 끝자락에 매달려있는 사람들은 가계부채 및 사교육비의 증가 등으로 나와 내 가족이 아닌 외부에 눈길을 줄 여력조차 없는 현실이다. 또한, 그 동안 시민단체에 정신적 지주로 활동하던 교수(교사), 변호사, 기자 등의 지식계층이 보수화되면서 시

민운동의 지양분이 되었던 인적 자원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시민운동 진영 내 세대 간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70~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에 기반을 둔 아날로그 세대와 사이버공간과 SNS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가 혼재하면서, 시민운동 진영은 2011년 한국사회에 부합하는 시민운동의 가치와 실천방향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 시민운동가를 평생 직업으로 삼고 싶은 청년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광주흥사단 역시 위기를 맞아 고심하고 있다. 1913년 도산 안창호선생은 일본과 같은 열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민족의 무력함을 보면서, 인격훈련, 단결훈련, 민주시민훈련을 통해 보다 새롭고 강한 대한민국 시민을 양성할 목적으로 흥사단을 창단했다.

이런 도산의 이념을 바탕으로 광주에 태동한지 46년 동안 약 6000명의 회원을 배출

하고, 5개의 부설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400여명의 후원자가 지원해주는 뿌리 깊은 시민단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10~20년 후의 광주흥사단 미래는 결코 밝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존 회원들은 활동에 소극적이고, 젊은 회원은 찾기가 힘들다. 또, 신규 세대를 아울러 광주시민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단 광주흥사단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조직 내 지도자들의 고민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광주흥사단을 포함한 광주시민단체의 발전을 위해 감히 한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광주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운동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감시 역할을 키워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시민 자신을 위해 공평하게 쓰이는지 알아보고, 인권 내지 복지권 소

외지역에 이런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대학 예산을 분석하고 학생, 대학, 시민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등록금 인하 대책위원회를 꾸려보는 일도 시민단체가 할 일이 아닌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시민단체 자신의 반성도 필요하다. 과연 이제까지 우리 시민단체의 활동들이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세대교체를 통한 시야가 젊은 세대의 입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또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익보다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앞세우는 국가나 정당,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공익에 더 관심을 두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광주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기로에 서있다. 한국 시민운동의 중심부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운동 진영 모두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논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힘써야 한다. 새로운 세대의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시민단체는 생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주흥사단 공동대표>

기고



이승호

지난해 우리 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9.8%로, 사상 첫 10%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임금근로자 168만명 가운데 16만430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7년 25.4%로 정점을 이뤘다가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2004년 이후에는 10%대를 기록했으나 9%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는 같은 해 기준 미국의 11.9%, 영국 26.6%, 일본 18.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노조 가입률이 하락하고 있는 주요인은 국내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과 IT산업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1989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40.6%에서 올해 19.7%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근로자는 같은 기간 46.4%에서 71.1%로 늘어난 것이 조직률 하락에 영향

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산업의 변화로 노조 조직률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다. 조직화가 어려운 서비스업·여성노동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일부 강성노조가 양보와 타협을 거부한 채 투쟁 일변도로 나아간 노동운동에 염증을 느낀 다수의 근로자가 노조를 외면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A노조와 B지자체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2011년 임금협상을 7차례 걸쳐 진행했으나 결렬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4차례 걸친 조정회의를 거치는 동안 최종적으로 노조는 3.73%, 사용자 3.4% 인상안을 고수해 더 이상의 양보와 타협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지노위에서는 회의 결과 다른 시·군의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률과 임금 수준, 형평성, 해당 지자체의 재정지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조합의 제시안에 가까운 3.6% 인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이를 수용했지만 노조는 거부해 결국 결렬됐다.

노사 상생만이 살길이다

B지자체에 속한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은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최상위권에 속한 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지출도는 19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현재 노동조합은 조정 결렬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O공사 D역의 12개사와 E노동조합은 20여 회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되자 조정을 신청했다. 임금인상폭과 노조활동 보장 등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 조정이 쉽지 않았다. 조정이 결렬될 위기에 놓였으나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타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결과, 7시간 남는 마라톤회의 끝에 협상을 타결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양쪽은 양보와 타협 대신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면서 서로 불신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 파업을 앞두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은 노사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느 길로 가야할 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달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비준돼 내년 1월1일이면 발효된다. 정부의 주장처럼 FTA가 우리 경제의 도약대가 될지, 아니면 미국에 예속되는 뜻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간 정부의 보호하에 안주했던 의약 등 서비스 분야와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무한경쟁에 적응하지 못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 피해도 예상된다.

거대 기업에 맞서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은 이미 시작했다.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노사 화합밖에 없다.

노동 운동도 변해야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탈법적인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와 사 모두 변해야 한다. 노사 상생은 노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서로를 극복의 대상이나 불신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상생이 아닌 공멸만이 있을 뿐이다. 특히 산업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광주·전남지역은 노사 상생만이 FTA를 극복하고 나아가 노동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대학 학점 퍼주기·세탁 심각... 상아탑 불신 초래

동생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 대학들의 학점 주는 것을 보면 이전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대학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받는 거라면 굳이 말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동생의 말을 들어보니 요즘 대학

졸업생 절반은 평균 A학점을 받을 만큼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한다. 이런 학점 퍼주는 서울과 지방의 지역구분 없이 모두 똑같은 현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학점 성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학점이 나쁠 경우 그것을 버리고 새로 높은 점

수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과목을 재수강해 높은 점수로 바꾸는 방식이다.

학점 성형이 유행하다 보니 학점이 낮은 학생들은 교수님께 오하라 그냥 재수강 허용 기준인 C+를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B학점 맞기보다는 C+를 받아 재수강 한 뒤 A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대학은 마음에 안 드는 학점은 아예 삭제할 수 있게 하는 학점 포기제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학문을 연마하고자 강의를 다시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가야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단순히 학점세탁을 위해 재수강을 반복한다면 그것이 어디 진정한 상아탑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모를 리 없는 기업들은 결국 대학의 학점을 불신하고, 학생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또 다른 사교육비를 치르는 현실이다. 정말 우리 대학이 이래로 관행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미현·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시설

기업투자 유치 역시 지자체 하기 나름이다

여수, 화순, 광주 북구 등의 투자유치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유치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임을 감안할 때, 이들 지자체에 대한 호평은 가뜩이나 열악한 광주·전남 경제의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수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3년 내 공장 신·증설 경험이 있는 40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88개 기초단체 중 여수시의 투자유치 만족도가 69.8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화순군(전국 2위)과 광주 북구(전국 5위)도 최상위권에 포함됐다.

이들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유치 기업들의 사전·사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한 덕분이다. 여수시의 경우 투자유치 전담반에서 각종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 기업들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해주는 '테크니션 스쿨'도 운영 중이다.

화순군과 광주 북구도 담당과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업유치 실적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과격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기업유치는 고용창출은 물론 인구 증가,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광주·전남지역은 지리적으로나 SOC 시설 등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의 수도권 위주 정책에 밀려 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스런 평가는 지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망 대·중기업의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역 지자체들은 타지역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인책을 수립하는 등 이들 3개 시·군·구의 사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 예산 삭감 객관성 전제돼야

광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년보다 많은 240억여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이는 시의회 출범 이후 사상 최대인데다 작년 삭감액 83억여 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에 달해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 예산 삭감액은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39억 원,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운영위탁비 8억 원,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47억 원, 남구청사 고효를 냉난방기 보급비 22억 원 등 모두 240억7000만 원(42건)에 이른다.

시의회는 철저한 예산심의를 통해 시급하지 않거나 사업비 과다·효과 미흡 등 타당성이 없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부서와 남구청 등은 '행정 발목잡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소속 노인들이 5일 오전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 삭감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다. 선심성, 남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단호하게 잘라내는 건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대로 검토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거, 감정이 개입하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예산의 효율성과 시급성부터 따져야 순서다. 예산이 삭감돼 안 될 사업이라면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해결위에서 살려내면 되는 일이다. 남비성,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로비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던 게 어제오늘의 일인가.

의회와 집행부는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광주시와 시민을 위해서다.

無等鼓

요즘 사극 '뿌리깊은 나무'가 인기다. 세종의 한글 반포 과정을 그린 이 드라마는 지나치게 교훈적이지 않아서 쉽게 다가온다. 이전에 세종을 그린 드라마는 왕업을 직접 찬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뿌리깊은 나무는 탄탄한 대본에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지랄하고 있네"라는 주연 한석규의 파격적인 대사까지 곁들여져 재미를 더하고 있다.

드라마는 한글 창제를 둘러싼 갈등을 통해 본 왕권과 신권의 대립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록권에 안주하려는 구세력과 한글 창제라는 '개혁'으로 왕권을 확립하려는 세종의 대립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겪는 현상으로, 현대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줄거리다. 여기에다 집현전 학사 살인사건 등을 버무려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흥미를 끌고 있는 이 드라마는 정치권의 흐름과 맞물려 '세종 리더십' 신드롬까지 불러왔다. 세종이 왕조시대 최고 권력자이면서도 빼어난 '정치'를 통

해 한글 반포를 성사시켰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최근의 상황과 대조된다.

역사학자 등에 따르면 실제로 세종은 한글 창제를 극비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도 설득도 병행했다고 한다. 당시 한글을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널리 유용한 한글 창제의 취지를 이해시키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따히 이 드라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력 정치인들이 '세종 리더십'을 강조해 주목된다. 유력한 대권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세우는 구세력과 한글 창제라는 '개혁'으로 왕권을 확립하려는 세종의 대립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겪는 현상으로, 현대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줄거리다. 여기에다 집현전 학사 살인사건 등을 버무려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흥미를 끌고 있는 이 드라마는 정치권의 흐름과 맞물려 '세종 리더십' 신드롬까지 불러왔다. 세종이 왕조시대 최고 권력자이면서도 빼어난 '정치'를 통

구체적인 정치 참여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1500억 원 상당의 기부금 건 등을 버무려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역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이사 申港樂		편집국장 李秉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192호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26	조사부	2200-571
대표FAX	222-41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F A X 227-96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1)
(대표FAX 222-4267)		전산팀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